

議會民主國家의 政治經濟와 支配政黨 —比較史的 考察—

金 秀 鎮*

次	
I. 문제의 제기	III. 정당지배의 역사적 전개 : 해 명
II. 정치경제체제, 그리고 지배정 당—역사적 조망	1. 정치경제체제를 둘러싼 비타 협적 대립
1.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와 사회민주적 정치경제체제의 대두	2.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연합
2. 케인즈적 정치경제체제와 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의 등장	3. 중요한 역사적 국면과 지배 정당
	4. 정당지배의 지속 혹은 쇠퇴
	IV. 결론

I. 문제의 제기

정부권력의 잊은 교체가 민주정치의 핵심적 요소라는 일반적 상식과는 달리 한 정당에 의한 장기적인 정부권력의 독점은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상 그다지 희귀한 현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적으로 권력을 독점한 지배정당 (dominant party)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서구민주국가의 정당 및 정당제도에 관한 허다한 연구문현 가운데서도 대단히 찾아보기 어렵다.⁽¹⁾ 본 연구는 이러

* 서강대 강사

(1) T. J. Pempel이 편한 *Uncommon Democracies: The One-Party Dominant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는 지배정당에 관한 연구로서는 아마도 유일한 단행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마파이당, 이탈리아의 기민당, 일본의 자민당, 그리고 스웨덴의 사민당의 장기지배가 가능했던 요인들을 연구 분석한 셈여 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다양한 연구결과들은 Pempel에 의해 훌륭히 종합, 분석되었다. 그러나 비록 이 책이 선진 민주국가에 서의 지배정당 연구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이를 국가에서의 일당지배의 전개과정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의의를 지니지만 Pempel의 분석은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관점에 입각한 연구 결과들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공통점의 나열에 머물고 만 아쉬움을 남긴다. 지배정당에 관한 얼마 안되는 기존의 연구문현 들에 관하여 Pempel이 이미 이 책 서론에서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의 반복은 생략하기로 한다.

한 학문적 공백을 메워 보려는 한 시도이다. 즉, 이 논문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의 역사상 결코 희귀한 현상이 아니었던 한 정당에 의한 장기적인 권력 독점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 설명함을 그 궁극적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민주국가에서의 一黨支配라는 현상이 단순히 한 정당의 선거에서의 연속적인 승리(consecutive electoral pluralities)나 그에 따른 장기적인 집권(uninterrupted governing longevity)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이 특정 민주국가의 정치경제(potitical economy)체제를 구축(shape)하고 또한 운영(manage)하는 역할을 독점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배정당은 오랜 집권기간 동안 그 국가의 민주적 정치제도에 특유한 사회-경제적 정체(identity)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경제운용(economic management) 및 사회조정(social arrangement)의 특정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시행하는 데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지배정당이라는 개념이 함의하는 ‘지배(dominance)’란 무엇보다 한 국가의 정치경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행사되는 특정 정당의 배타적 권한(exclusive mandate)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타적 권한이 한 정당에 의해 어떻게 획득, 유지, 상실되는가에 관해 체계적인 해명을 시도하려는 것이 이 소론의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일본 및 서구 의회민주국가들의 정치사를 간략히 조망하여 이를 국가의 역사상 발견할 수 있는 정치경제체제의 유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정치경제체제들이 각국의 지배정당의 발달 및 쇠퇴와 어떠한 역사적 연관성을 가졌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국가에서 생성, 소멸하였던 지배정당들을 이들이 구축한 정치경제체제의 특성에 의거하여 지배유형별로 분류를 시도하겠다. 그런 다음 이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당지배의 생성, 유지, 소멸에 관한 체계적인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정치경제체제, 그리고 지배정당—역사적 조망

1.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와 사회민주적 정치경제체제의 대두

본 논의의 출발점으로 일차대전이 끝난 시점을 택한 이유는 일차대전이 서구 민주정치사上の 획기적인 분수령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서구 민주국가들은 거의 모두 일차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요한 제도개혁들을 단행했다. 즉,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민주제도 수립을 위해 헌법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개헌을 단행하였으며,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는 선거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중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 벨기에와 영국은 복수 투표제도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그 권한의 행사자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평등선거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보다 공평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많은 나라들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 이 이 시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Flora, 1983; Mackie and Rose, 1982). 따라서, 비록 여성의 투표권은 이들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직 확립되지 못했지만, 대중민주주의의 제도적 기틀은 서구의 모든 나라에서 일차대전이 끝난 직후에 완전하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과 발을 맞추어 각국의 정당체계(party system) 역시 이 시기에 대체로 완성되어 향후 수십년간 “동결(凍結)”되었다고 볼 수 있다(Lipset and Rokkan, 1967). 이것은 곧 정권을 담당하게 될 정치세력의 범주 역시 일차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정치사적 의의는 제도개혁이나 현대적 정당체계의 확립 등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세계대전의 격심하고도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전 유럽 인민들의 폭발적인 정치적 동원으로 이어졌으며, 또한 이들의 정당체계에 대한 급속한 결속(alignment)을 유발시켰다. 이 시기의 정치적 동원의 물결은 정치권 및 노동시장 양 영역에서의 노동세력의 폭발적 성장에 의해 상당 부분 촉발된 현상이었다. 전쟁이 가져 온 경제적 궁핍, 러시아 혁명 이후 유럽 전역에 파급되었던 혁명의 열기, 또한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평등한 정치 참여 및 대의제도의 확립 등에 힘입은 노동계급의 대폭적인 정치세력화는 기존의 정치 경쟁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민주개혁, 종교, 지역 등을 둘러싼 전쟁 이전의 주요한 정치적 갈등과 분쟁의 요소들은 전화에 휩싸인 유럽을 뒤흔든 景氣의 악순환 속에서 격화되었던 계급적 갈등에 압도되었으며, 각국의 사회-경제적 세력들은 각자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거해서 정치적 결속 혹은 재결속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후의 정치적 동원, 특히 계급분열(class cleavage)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축으로 등장함에 따른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사회주의 정당들의 의회내 세력의 급속한 신장이었다. 즉,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한 거의 모든 유럽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거나(스웨덴; 1917년부터／오스트리아; 1919년／독일; 1919-30년／덴마크; 1924년부터／노르웨이; 1927년부터／스위스; 1935년부터) 아니면 최소한 원내 제 2 당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네덜란드; 1918년부터／벨기에, 프랑스; 1919년부터／이탈리아; 1919-21년／스위스; 1919-31년／오스트리아; 1920년부터／영국; 1922년부터). 전후의 소위 ‘부르조아 유럽의 재편’⁽²⁾은 이처럼 급성장한 노동 및 사회주의 세력의 위

(2) Charles Maier, *Recasting Bourgeois Europe: Stabilization in France, Germany, and Italy in the Decade after World War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협이 강요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전통적으로 진보적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대표했던 많은 나라의 보수정당들은 이제 사적 이윤동기와 시장 메카니즘이 지배하는 사회-경제적 질서의 열렬한 대변자가 되었다. 심지어 종교적 정당들조차도 反사회주의라는 사회-경제적 외투를 걸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모든 의회민주주의 국가는 예외없이 사회-경제적 질서의 정체를 둘러싼 사회, 정치적 세력들 간의 비타협적 대립과 투쟁으로부터 일차대전 이후의 정치를 시작하였다. 그 투쟁은 본질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정통성을 옹호하려는 세력과 사회주의적 사회경제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체제변혁 세력 간의 최초의 본격적인 정면충돌을 의미했다.

새로운 민주질서에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체(socio-economic identity)를 부여하는 권한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한 이 역사적 투쟁은 곧 사회 및 경제 질서에 관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념 간의 충돌이기도 했다. 유럽의 모든 사회주의 정당들은 — 의회주의에 입각한 사회 경제체제 개혁을 믿었던 믿지 않았든 —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지언정 예외없이 산업적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정통 사회주의 원칙을 표방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의 공세에 대해서 각국의 지도적인 비사회주의 정당들은 — 그들이 보수당이었던, 자유당이었던, 혹은 종교적 정당이었던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 및 통제되지 않는 시장질서의 지배를 주창하며 맞섰다. 따라서 이 역사적 대결은 급진적 개혁세력과 현상유지 세력 간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통 자유주의의 주창자들은 근본적으로 방어적이며 보수적이었다. 혹은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심지어 시대역행적인 성향을 띠었다. 즉, 그들은 국내 및 국제경제 질서를 전쟁 이전의 균형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열망하였으며, 그 열망은 전쟁 이전과의 等價性에 입각한 金本位制度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또한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재앙의 한 커다란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Aldcroft, 1977).

이 첫번째 역사적 대결에서 어떠한 사회주의 정당도 사회주의적 사회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배타적 권한을 획득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일차대전 이후에 벌어졌던 정통 사회주의와 정통 자유주의의 간의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대결에서 사회주의 노선의 패배는 확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패배가 유럽의 모든 의회민주국가 내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안정된 지배력을 담보해 주지는 못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1975). 양차대전 사이에 형성된 유럽의 정치 질서를 특히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장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 하에서 비교사적 분석을 가한 연구로서는 특히 Gregory M. Luebbert, *Liberalism, Fascism, and Social Democracy: Social Classes and the Political Origins of Regimes in Interwar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thcoming)을 참조.

에서는 정통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안정된 反사회주의 연합(anti-socialist alliance)이 결성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기독사회당, 벨기에의 카톨릭당, 영국의 보수당, 그리고 스위스의 급진민주당 등은 단독 혹은 다른 소수 정당과 연립하여 양차대전 사이의 정부권력을 대체로 지속적으로 장악하여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질서를 이들 국가에 안정화시킨 지배정당(dominant party)이 되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카톨릭당, 반혁명당, 그리고 기독역사연합 3당에 의한 강력한 反사회주의 연합이 결성되었으나, 이들 중 어느 정당도 타 정당에 대해 결정적인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양차대전 사이의 네덜란드에서는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지배적 정치연합이 형성되어 배타적이지만 동등한 권한을 세 정당이 공유하였던 반면 지배정당의 등장은 없었다. 프랑스에서도 최소한 ‘인민전선(popular front)’의 실험이 있기까지는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사회-경제적 질서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취약한 정당체계 역시 지배정당을 배태시키지는 못했다.

여타의 유럽국가들에서는 정통 자유주의와 정통 사회주의 간의 비타협적 대립이 결정적 승자를 내지 못한 채 지속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성격은 다르지만 스페인 — 사회경제적 질서를 안정시키는 댓가로 민주적 정치제도를 희생시켜야만 하였다.

한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비타협적 대립이 결정적 승자를 내지 못한 채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중 이들 국가는 유럽 최악의 산업투쟁 하에서 대단히 불안정한 소수내각시대를 거쳐야만 했다. 자-사(自-社)간의 교착된 대결상태(deadlocked confrontation)는 이들 국가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대공황의 내습 이후 정통사회주의의 노선을 포기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조성된 새로운 성격의 대립 — 경기부양적 개입주의(reflationary interventionism) 대 경기순응적 자유주의(deflationary liberal orthodoxy) — 은 이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사회민주주의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즉, 대공황이라는 특수한 경제적 위기 하에서 조성된 새로운 성격의 대립을 통해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사회민주주의 전당들은 자국의 정치경제체제를 자신들의 뜻대로 구축하기 위한 배타적 권한(exclusive mandate)을 획득한 지배정당으로 등장하였다. 그것은 또한 이들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정통 사회주의의 노선을 포기함으로써만 가능했던 역사적 이정표였다.

따라서,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상 사회민주적 정당지배는 오로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상황 하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기존의 이념틀을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배정당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정통 자유주의와 정통 사회주의를 모두 부인하고 정치경제에 대한

그들의 최초의 통제력을 原케인즈적 개입주의(proto-Keynesian interventionism)에 입각해서 행사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사회민주적 정치경제체제의 구축은 2차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 국가에서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기본적인 성격은 1) 노동운동의 압도적인 조직력과 결속력, 2) 사회정책 및 경제 정책의 발의, 토의, 결정, 및 시행의 전 과정에 대한 조직노동의 준 주권적(semi-sovereign) 발언권, 3) 제도적 복지국가(즉, 자유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와 대비되는)의 수립, 4) 완전 고용의 달성을 유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한 경제 운용, 그리고 5) 명시적인 소득정책 혹은 집중적 단체협약을 통한 단합적 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의 시행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사회민주주의적 정치경제체제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구축하는데 스칸디나비아의 모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똑같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3국을 놓고 볼 때 덴마크 사민당의 성취도가 가장 낮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차대전 이후 덴마크 사민당이 자국의 정치경제체제 구축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최소한 30년 이상 그러한 배타적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오직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이 두 나라 사민당의 정치적 운명 역시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했다. 즉, 비록 1970년대 이후 쇠퇴의 조짐을 보여왔으며 또 1976년 이후 6년간 정치권력을 부르조아 연립정부에 양도하기도 했으나 스웨덴 사민당의 지배정당으로서의 위치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 반면 1960년대 이후 노르웨이 노동당의 쇠퇴는 매우 급속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이 정당이 노르웨이 정치경제 운용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케인즈적 정치경제체제와 新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의 등장

한편 제 2 차 세계대전은 의회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며 이들 국가의 정치경제체제의 성격 및 정당지배의 판도에도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본고의 분석 목적에 비추어 볼 때 2차 대전이 가져 온 가장 큰 변화는 사회-경제적 질서의 한 대안으로서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가 결정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서구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정통성파의 결별(breaking with orthodoxy)”은 대공황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Gourevitch, 1986 : 124ff.). 사회민주당이나 파시스트 정권을 장악한 국가들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들조차 심각한 경제위기의 극복책으로서 관세, 평가절하, 내수시장에 대한 부분적 통제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된 개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입은 어디까지나 비정상적인 경제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조처에 불

과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부터는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더 이상 일시적이며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상적인 역할로서의 정통성을 완전히 획득하게 되었다. 양차 대전 사이에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격심한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2차대전이라는 대재앙에 대한 책임의 일단이 파시즘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자유주의의 무능에 있다는 보편적 통념, 그리고 급속하고 효율적인 전후복구의 절실한 필요성 등이 결합하여 자유방임주의를 결정적으로 퇴조시켰다.⁽³⁾ 따라서 2차 대전 이후부터 경제행위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간주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간섭의 필요성에 대하여 폭넓은 합의가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정부간섭의 구체적 성격에 관한 합의를 의미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경제운용의 일반적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혹은 정책적 수단에 대한 견해는 나라마다, 심지어 한 국가 내의 정치세력마다 다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 확립했던 다양한 정치경제체제들은 케인즈주의(Keynesianism)와 新자유주의(neo-liberalism),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상이한 성격의 국가개입주의(interventionism)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⁴⁾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케인즈주의가 지배정당의 쇠퇴 및 소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반면 新자유주의는 새로운 지배정당의 출현과 강력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케인즈주의는 무엇보다 경제운용 및 사회조정에 대한 정통 자유주의와 정통 사회주의 간의 비타협적 대립을 사회-정치적 세력 간의 광범위한 합의와 타협으로 치환시켰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⁵⁾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한 케인즈적

(3) 칼 폴라니가 1944년에 출판한 *The Great Transformation*은 통제받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당시 팽배했던 불신감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 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1957).

(4) 필자는 바로 이 점에서 전후의 선진 민주국가의 정치경제가 타협적인 혼합경제체제로 일괄 수렴하였다는 Gourevitch의 역사적 시각과 견해를 달리 한다. Gourevitch, *op. cit.* 참조.

(5) 이에 관해서는 특히 John H. Goldthorpe, "Problems of Political Economy after the Postwar Period," in Charles S. Maier, ed., *Chang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Essays on the Evolving Balance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Public and Private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364ff. 참조. 케인즈적 사회-경제정책에 관한 일반적 논의 및 전후 케인즈적 정치경제의 서구민주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영향에 관해서는 특히 Andrew Shonfield, *Modern Capit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Harold Wittell, ed., *The Policy Consequences of John Maynard Keynes* (New York: Sharpe, 1985); Peter A. Hall, ed., *The Political Power of Economic Ideas: Keynesianism across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등을 참조.

경제개입이 지향했던 것은 국가의 경제체제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노동계급을 시장의 무자비한 지배로부터 일정 수준 보호해 주며 또한 이들에게 경제성장의 과실에 대한 적정한 지분을 용인해 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정책 시행에 엄격한 우선성을 적용했던 신자유주의적 개입에 비해 케인즈주의가 본질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사회 및 경제질서와 그 운용에 대한 전반적 타협의 유지 및 관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것은 고용과 물가, 성장과 분배, 소비와 투자 간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노-사 간의 이해에 대한 타협적 조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사회-경제질서를 둘러싸고 비타협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회적, 정치적 세력 간의 이와 같은 타협은 유럽의 많은 의회민주국가에 ‘합의에 의한 케인즈주의(consensual Keynesianism)’의 황금기를 도래케 했다. 그 황금기는 사회복지의 지속적인 확충, 사실상의 완전 고용, 꾸준한 경제성장, 그리고 만개한 산업평화 등으로 대표되었으며, 그것은 전후 미국의 주도 하에 확립된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체제의 원활한 기능에 의해 70년대 초반까지 굳건히 지탱되었다(Keohane, 1984).

그런데, 케인즈적 타협에 의거하여 정치경제체제를 구축한 국가에서는 당연히 어떤 정치세력도 정치경제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존재했던 기존의 지배정당들은 케인즈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급속히 그 지배력을 상신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경제운용 및 사회조정에 관한 정치세력 간의 비타협적 대립이 소멸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계급갈등의 정치적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계급에 입각한 정당결속도(party alignment)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신 여타의 사회적 분열의 요소들—지역, 언어, 종교 등—의 정치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이 계급분열의 축을 종단(cut across)함으로써 선거인들의 정당에 대한 재결속(realignment)을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정당체계(party system)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연립정부의 형태 역시 그 다양성을 증폭시켰으며, 돌발적인 사안(contingent issues)에 따른 연립의 교체(shifting coalition) 역시 빈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 정당에 의한 정부권력의 장기적인 독점은 지극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기본 질서에 관하여 정치 및 사회세력 간의 광범위한 타협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한 정당에 의한 정치경제에 대한 배타적 지배 및 정부권력의 장기적인 독점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케인즈주의는 많은 서구 민주국가에서 지배정당의 소멸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양차대전 사이의 보수당 지배의 시대가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막을 내렸으며,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경제운용에 대한 보수-노동 양당간의 점

증하는 합의는 영국정치의 주기적인 정권교체의 시대를 열었다(Beer, 1982; Hall, 1986). 전후 영국의 정권교체는 대체로 집권당의 경제운용 실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평가에 상당 부분 말미암은 것이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1970년대말 케인즈적 합의가 영국에서 결정적으로 깨어지고 경제운용에 관한 보수-노동 간의 대립이 격화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보수당의 계속적인 집권이다.

벨기에에서의 케인즈적 타협은 1930년대 중반에 이미 카톨릭당과 노동당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때 이후 양당에 의한 연립내각, 혹은 자유당을 포함한 3당 연립내각은 벨기에의 가장 빈번한 정부형태가 되었다.⁽⁶⁾ 이처럼 경제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정당 간의 광범위한 합의 하에서 벨기에 사회의 전통적인 분열요인—즉, 1950년대의 교육문제를 둘러싼 종교적 갈등(clerical/anti-clerical cleavage)의 심화 및 1960년대의 시작과 더불어 악화된 언어/지역 갈등(linguistic cum regional cleavage)—들이 또 다시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정당체계 및 정치경쟁의 양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카톨릭당의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위치는 점차 쇠락해갔으며 종교, 지역, 언어, 계급 등에 의해 고도로 분절된 사회(highly segmented society)내에서 종교적 가치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그 세력을 지탱해 나갔다.⁽⁷⁾ 따라서 벨기에의 카톨릭당은 비록 장기적인 집권력을 2차대전 후에도 지속해 나갔지만 이 정당을 전후 벨기에의 지배정당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Fitzmaurice, 1988; Lorwin, 1966; Hill, 1974).

스위스에서의 경제운용 및 사회조정에 관한 정당 간의 광범위한 합의는 특히 1943년부터 스위스연방평의회(Bundesrat 혹은 Conseil fédéral)에 사회민주당을 합류시킴으로써 완성되었다. 그때 이래 급진민주당은 7인으로 구성되는 연방평의회에서 절대다수의 대표권을 상실하였으며, 그것은 또한 이 정당이 더 이상 스위스의 지배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였다(Von Geyserz, 1977 : pp. 1162ff).

한편 2차대전 후 새로 수립된 오스트리아의 제2공화국에서는 사회, 경제 질서에 대한 완벽한 케인즈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사민 양당의 거국내각이 20여년간 지속되었다. 이 양당은 내각구성에 있어 완벽한 ‘균형(Proporz)’의 원칙을 유지하였으며, 그것은 또한 정치경제 영역에 군건히 제도적 뿌리를

(6) 1935년부터 1980년 사이 카톨릭-노동(사민)의 2당 연립내각은 13년, 3당 연립내각은 12년, 카톨릭-자유 2당 연립은 9년간 집권을 하였다. Flora, *op. cit.*, pp. 159-60 및 John Fitzmaurice, *The Politics of Belgium; Crisis and Compromise in a Plural Society*, 2nd ed. (London: C. Hurst & Company, 1988), pp. 250-51 참조.

(7) 카톨릭당의 득표율은 전쟁 직후의 47.7 퍼센트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1987년 마침내 사회당에게 다수당의 지위를 내주었을 때의 득표율은 27.5 퍼센트에 불과했다. Fitzmaurice, *op. cit.*, p. 252.

내린 ‘사회제휴체제(social partnership)’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Sully, 1981: 20ff.).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는 2차대전 이후 부르조아 정당들이 케인즈적 개입주의 및 사회복지의 증진정책들을 대폭 수용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양국의 사회민주정당이 자국의 정치경제체제를 통상적인 케인즈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민주주의적 이상에 보다 근접시키는 데 정치적 역량부족(덴마크) 혹은 노력부족(노르웨이) 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요인과 맞물려서 이 두 나라의 정치경제체제 역시 합의에 의한 케인즈주의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였다. 또한 이 양국에서의 사회민주적 지배는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공히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상의 모든 사례들은 타협적 케인즈주의 정치경제체제의 권력 독점에 대한 놀라운 억지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들이다. 실제로 케인즈주의는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지배의 해제자(terminator of dominance)’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케인즈주의는 2차대전 이후 의회민주국가들이 확립하였던 유일한 개입주의적 정치경제체제가 아니었다. 전후 민주적 정치제도를 새로이 구축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정치세력 간의 합의나 타협이 아니라 비타협적 대립이 지배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들 국가의 지도적 좌파 정당—즉, 독일 사민당, 이탈리아 공산당, 일본 사회당, 프랑스 공산당—들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정통 사회주의 노선을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非사회주의 정당들은 反사회주의 전선을 이미 신뢰성을 상실한 정통 자유주의의 가치 아래 결성하려 하지 않고, 新자유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선별적 국가개입주의를 경제운용 및 사회조정의 지도원리로서 표방하였다.

정통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균형과 안정이 전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역시 케인즈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간섭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였다. 반면, 케인즈주의가 다양한 거시 경제적 목표들 간의 타협과 조화를 지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입주의가 지향했던 것은 경제운용 및 사회조정의 목표설정에 있어서의 분명하고도 엄격한 우선순위의 부여였다. 즉, 분배에 대한 성장의 우선, 소비에 대한 투자의 우선, 고용에 대한 물가안정의 우선은 신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확고한 원칙이었던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그 지상과제를 고도성장의 정치경제를 제도화하는 데 두었으며, 사회 및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무엇보다 이 목표에 부응하도록 조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개입은 케인즈적 개입에 비해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선별적이며, 또한 보다 관료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피폐한 국가경제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나아가 더 큰 성장을 이루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근본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시장의 조직화 및 그 효율성의 극대화였다. 그리고, 소비와 분배가 아니라 투자와 성장에 대한 엄격한 우선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세력을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으로부터 철저히 배제시키는 정치경제체제의 제도화가 필수적이었으며, 또한 노동계급의 물질적 이익은 공공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가 주로 지배하는 사적 영역에서의 조정의 문제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와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려는 정치세력과 정통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정치세력 간에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의 성격에 관한 타협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었다. 따라서 전후 새로이 민주적 정치제도를 출범시킨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의 정치는 정통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 간의 비타협적 이념적 대결로 그 막을 올렸던 것이다. 이 새로운 대결에서 정통 사회주의 노선은 또 다시 완벽한 패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독일의 기민기사연합(CDU/CSU), 이탈리아의 기민당(DC),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LDP)은 이들 신생 민주국가의 지배정당으로 등장하여 이들 국가에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를 구축, 운용하는 베타적 권한을 확보하였다. 프랑스 제4공화정 역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성장 우선의 사회-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제3공화정 아래 프랑스 정치의 만성적 문제였던 정당체계의 불안정은 전후에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프랑스 제4공화정은 지배정당을 출현시키지 않은 채 1958년 내각제를 포기하는 시점까지 대체로 불안정한 중도-우파 연립의 정부형태를 지속하였다. 한편 독일에서의 기민기사연합의 지배는 1960년대 후반 사민당과의 大聯政 결성 및 그에 이은 사민-자유 연립 내각 수립에 의해 종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독일의 경제운용의 기조를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주도하의 신자유주의로부터 셀러(Karl Schiller) 주도 하의 케인즈주의로 전환시키는 데 대한 기민, 사민 양당 간의 합의가 대연정 수립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즉, 독일에서의 지배정당 소멸의 배후에도 역시 케인즈적 타협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이탈리아 기민당과 일본 자민당의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베타적 권한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공산당과 일본사회당이라는 위협적이면서도 동시에 무기력한 비타협적 저항 세력의 존재에 힘입은 바 컸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전후 부르조아 정당들이 케인즈적 경제개입 및 복지정책

을 대폭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민당의 사회민주적 정치경제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은 상실되지 않았다. 그것은 사민당의 끊임없는 정책개발, 특히 사회·경제적 쟁점들을 둘러싼 부르조아 정당과의 이념적, 정책적 대립을 지속시키려는 사민당의 의도적인 전략, 그에 따라 전후 스웨덴 정치를 포괄적인 타협보다는 좌·우간의 반복적인 대립과 대결로 이끌어간 결과였다. 사민당의 이러한 전략 및 정책의지에 따른 결과로 전후 스웨덴의 정치 경제는 점진적, 지속적으로 좌경화하여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사적 자본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 결과 스웨덴에서의 계급갈등은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집권 사민당이 조직 노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시도한 혁신적 정책에 대한 부르조아 정당들의 지속적인 저항은 곧 노동계급의 사민당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담보해 주었던 것이다.

한편 70년대 중반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즈주의의 아킬레스腱을 강타하고 케인즈적 사회·경제정책을 지속해 온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경제운용 상의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조성해 놓았던 케인즈적 정치경제체제 — 예컨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준제도화된 협의적 노사관계, 대폭 늘어난 공공부문, 확대될 대로 확대된 사회지출, 자원 및 사회적 가치의 협의적 분배양식 등 — 를 새로운 경제위기가 하루아침에 와해시킬 수는 결코 없었다. 즉, 이들 대부분의 나라는 케인즈적 정치경제로부터의 이탈을 가능케 해 주는 정치적 출구(*politically viable exit*)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아직도 골드토프가 명명한 소위 “케인즈적 교착상태 (Keynesian impasse)”⁽⁸⁾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쩌면 영국은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 간주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대처리즘으로 상징되는 신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이 과연 영국을 수십년간의 “케인즈적 침체(Keynesian stagnation)”로부터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느냐는 물음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상의 역사적 조망을 토대로 볼 때, 일차대전 이후 선진 의회민주국가들이 경험한 정치경제체제는 크게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파시즘, 신자유주의 및 사회민주주의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파시스트 정치경제를 제외하고 볼 때, (타협적)케인즈주의는 지배정당의 권력독점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한 반면 나머지 정치경제체제는 지배정당을 동반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배정당들 및 그들의 지배시기를 그들이 구축한 정치경제체제에 의거한 지배유형별로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8) 이에 관해서는 Goldthorpe, *op. cit.* 참조.

〈표 1〉 의회민주국가의 지배정당

국 가	지배정당	주요반대당	지배기간
1. 자유주의적 지배(자유방임주의 정치경제)			
오스트리아	기독사회당	사회민주당	1920-1934
벨기예	카톨릭당	노동당	1921-1935
영국	보수당	노동당	1922-1945
스위스	급진민주당	사회민주당	1919-1943
2. 사회민주적 지배(原케인즈주의/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			
노르웨이	노동당	부르조아 연합	1935-1965
덴마크	사회민주당	보수당	1929-1945
스웨덴	사회민주당	부르조아 연합	1932-현재
3. 신자유주의적 혹은 보수적 지배(신자유주의 정치경제)			
독일	기민기사연합	사민당	1949-1969
이탈리아	기민당	공산당	1948-현재
일본	자민당	사회당	1955-현재

III. 정당지배의 역사적 전개 : 해명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정치경제체제의 구축 및 유지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배정당들의 역사적 등장, 지속, 그리고 쇠퇴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은 모든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과 함께 각 지배유형의 특이성 역시 해명할 수 있는 차별성을 동시에 지녀야 할 것이다.

1. 정치경제체제를 둘러싼 비타협적 대립(intransigent confrontation)

전술한 역사적 조명을 통해 이미 드러났듯이 모든 지배정당은 신생 민주적 정치체에 확립할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에 관해 서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념과 원칙을 표방한 정치세력들 간의 대결의 산물이었다. 즉, 자유주의적 지배정당은 자유방임주의와 정통 사회주의 간의 대결을 거쳐 등장하였으며, 신자유주의적(혹은 보수적) 지배정당 역시 정통 사회주의 노선을 제압하고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적 지배정당의 출현 역시 이들이 표방한 原케인즈주의적 개입주의의 정통자유주의에 대한 승리의 결과였던 것이다.

이 모든 대립은 새로이 수립된 민주적 정치체에 어떤 성격의 사회-경제적 정

체(socio-economic identity)를 부여할 것인가를 둘러싼 서로 상충하는 이념 간의 대결이었다. 그것은 곧 각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접두사를 — 자유, 사회, 혹은 신자유 — 붙일 것인가를 둘러싼 대결을 뜻하기도 하였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모든 비타협적 대립이 이들 국가에 심대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동반했던 ‘중요한 역사적 국면(critical historical junctures)’ — 즉, 양차의 세계대전 직후 및 대공황 —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하에서 벌어졌던 정치경제 체제를 둘러싼 비타협적 대립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대폭적인 정치적 동원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첨예하게 대치된 계급적 이해관계에 의거하여 급속한 정치적 재편을 하도록 촉발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배정당의 출현은 어느 정당이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표방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이 그 사회 내에서 다수를 점하는 사회세력으로부터 확고하고도 안정된 지지를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2. 사회적 분열(social cleavages)과 정치적 연합(politics of alliance)

그런데, 이와 같은 비타협적 대립들이 반영하고 있었던 것은 본질적으로 도시의 계급투쟁(urban class struggles)이었다. 즉, 국가권력 및 정치경제체제 수립의 배타적 권한을 둘러싼 대립과 대결을 주도한 정치세력들은 전통적 부르조아 계급 — 자본가, 자영업자, 자유업자 — 과 도시노동자의 상충하는 계급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들이었다. 그런데, 역사상 이 두 계급 중 어느 쪽도 사회 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어느 정당도 이들 중 한 계급 만의 지지를 통해 안정된 지배권을 구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도시계급구조 및 도시계급투쟁의 이와 같은 불충분성은 농민(광의의 일차산업종사자)을 지배정당 출현을 결정짓는 중추적 사회세력(pivotal social force)으로 만들었다. 즉, 지배정당의 출현은 특정 정당이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의 핵심지지계급과 농민과의 포괄적이며 안정된 지배연합을 구축해내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적,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지배정당의 출현은 이들 정당들이 성공적으로 전통적 부르조아계급과 농민과의 연합된 지지를 획득, 유지함으로써 가능했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적 지배정당 역시 성공적인 노농연합(勞農聯合; red-green alliance)을 통해 등장하였다.

농촌인구의 중요성은 우선적으로 그 수적 세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농촌지역은 지배정당 출현시기에 도시에서의 정치적 균형을 결정적으로 깨뜨리기에 충분한 수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⁹⁾ 문제는 왜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특정 국가의 농민들이 도시의 특

(9) 〈표 2〉에서 보듯이 일차대전이 끝날 무렵 영국의 농촌인구는 이미 정치권력의 향

〈표 2〉 제1차 산업 종사 노동력 추이, 1906-1981(%)

국 가	1906-11	1920-21	1930-31	1939-41	1950-51	1960-61	1970-71	1980-81
오스트리아	56.9	—	31.9 ^b	39	32.3	22.8	13.8	10.1
벨기예	22.4	19.1	17.0	—	12.1 ^c	7.2	4.5	2.6
덴마크	42.7	29.3	35.2	29.9	25.6	17.8	10.6	6.7
프랑스	42.7	41.5	35.6	36.5 ^d	27.2 ^f	20.3 ^g	15.3 ^h	7.8
독일	35.2	30.5 ^a	28.9 ^c	26.0	23.2	13.5	7.5	5.6
이탈리아	55.5	55.7	47.3	—	40.0	28.2	16.3	12.8
네덜란드	28.4	23.6	20.6	—	18.8 ^e	10.7	6.1	5.4
노르웨이	29.3	36.8	35.3	—	25.9	19.5	11.6	8.3
스웨덴	45.6	40.4	35.4	28.8	20.3	13.8	8.1	5.5
스위스	26.8	27.1	21.3	20.8	16.5	11.2	7.7	7.2
영국	8.0	7.8	6.0	—	5.1	3.6	2.5	2.5
일본	—	—	—	49.9 ^e	45.2	30.1	17.9	10.4

^a1925 / ^b1934 / ^c1933 / ^d1946 / ^e1947 / ^f1954 / ^g1962 / ^h1968

[자료] 일본 : Fukutake Tadashi, *Rural Society in Japan*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80), p. 12 및 *Asahi Nenkan* [*Asahi Yearbook*] 1981. 기타 : Peter Flora, et al., *State, Economy,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1815-1975* (Chicago: St. James Press, 1987), vol. 2, ch.7 및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82* (Geneva, 1982).

정 사회계급과 연합하였는가이다. 왜 1차대전 후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도시와 농촌에 걸친 광범위한 反사회주의 연합이 결성될 수 있었던 반면 같은 시기의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그러한 연합이 결성되지 못했는가? 대공황기에 왜 스칸디나비아의 농민들은 도시노동자와 연합한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와 유사한 노농연합이 결성되지 못했는가? 또한 2차대전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농민들은 왜 도시의 노동자가 아니라 부르조아 계급과 정치적 제휴를 하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충분한 해답은 각 역사적 국면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및 이 상황에 대한 각 정당들의 전략적, 정책적 대응에 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배를 좌우할 만한 수적 세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 보수당의 지배권이 부르조아-농민연합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필자의 추론은 이 시기의 영국에서는 이미 도시의 비육체적 근로자, 즉 화이트칼라 봉급생활자들이 전략적 연합세력이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론을 떠받쳐줄 경험적 증거는 대단히 미약하다. 그것은 특히 영국의 노동통계가 전통적으로 육체노동자와 비육체노동자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더구나, 계급투표(class voting)에 관한 영국의 연구들은 최근까지도 대단히 주관적인 계급분류에 의거해 왔다. 어쨌든 필자가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위안은 한 가지 일탈사례(deviant case)가 비교분석의 전 체계를 와해시킬 수는 없다는 레이프하트의 주장이다. Arend Lijphart,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3 (September 1971), p. 686. 영국에서의 통상적인 계급분류방식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특히 Anthony Heath, et al., *How Britain Votes* (Oxford: Pergamon Press, 1985), pp. 13-16 참조.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연합에 관해서도 사회구조적 요인만으로는 만족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¹⁰⁾ 사회의 계급구조는 명백히 정치권력 및 배타적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의 양상을 제한한다. 지배정당 출현의 전략적 연합세력으로서의 농민의 중요성은 분명 사회의 계급구조 및 도시의 계급투쟁의 양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요인만으로는 특정 역사적 국면에서 왜 특정 유형의 지배연합이 성립하였는가에 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 농민이 제휴의 대상으로서 부르조아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노동자를 선택하는가, 혹은 어떠한 도시의 사회계급과의 제휴도 거부하는가 하는 문제는 구조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분열은 구조적일 수 있으나 사회계급간의 연합은 정치적이다. 지배정당은 이러한 견지에서 특정 사회경제적 국면에 대응한 ‘정치적 창조행위 (political crafting)’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요한 역사적 국면(critical historical junctures)과 지배정당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분석영역 내의 모든 지배정당들은 국내외적으로 격심한 경제적 혼란을 동반한 중대한 역사적 국면—즉, 양차의 세계대전 직후 및 대공황기—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운용을 둘러싼 논쟁을 각국 정치의 최우선적 의제로 옮겨놓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 논쟁의 핵심은 팽창하는 사회적 가치와 부를 여하히 분배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격증하는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 질 것이냐는 문제였으므로 타협이나 합의보다 대립과 투쟁이 사회 및 정치 영역에서의 지배적인 양상이 되기가 쉬웠다. 그러나, 위기-대립-지배로 이어지는 인과의 사슬은 결코 자동적이며 단선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합의 및 사회적 타협 역시 2차대전 이후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이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역사적 국면

(10) 필자는 이 점에서 사회적 연합의 상이성을 구조적 요인을 통해 해명한 근대적 레짐(regimes)의 발전에 관한 몇몇 비교사적 연구들과 입장을 달리 한다. 예컨대 Barrington Moore, Jr., *Th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1966); John D. Stephens, “Democratic Transition and Breakdown in Europe, 1870-1939: A Test of the Moore Thesis,” *The Helen Kellog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Notre Dame, Working Paper #101 (November 1987); Luebbert, *op. cit.* 참조.

(11) 바로 이러한 점들이 ‘위기’의 정치적 영향에 관해 상반된 견해를 배태시켰다. 즉, 위기적 상황을 지배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위기는 사회정치적 협의체제의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전자의 입장에 관해서는 Pempel, “Conclusion,” in Pempel, *op. cit.*, pp. 341-44 참조. 후자에 관해서는 Charles S. Maier, “Preconditions for Corporatism,” in John H. Goldthorpe, ed.,

들의 위급한 경제적 상황은 최소한 지배정당 출현의 필요조건을 구성하고 있지 않나 여겨진다. 특히 각 역사적 국면의 특이한 경제적 상황은 특정 사회적 연합의 가능성을 제약함으로써 각 국면에서 등장할 수 있는 지배유형을 제한하였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주로 각 경제적 국면에서 농민들이 인식했던 물질적 이해관계가 그들의 사회연합의 선택 폭을 제한한 탓이었다. 구체적으로, 세계대전 직후의 경제적 상황은 농민들로 하여금 정통사회주의를 매력적인 정책노선으로 여길 수 없게 한 반면 대공황은 농민들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켰다.

전쟁에의 직접적 참전 여하를 막론하고 양차의 세계대전은 우리의 분석대상을 구성하는 모든 국가들을 격심한 식량부족 및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통된 경제위기에 빠뜨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식량의 배급제 및 가격통제 등은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실시되었으며, 전후에도 식량부족 및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이 충분히 완화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통제'의 지속이냐 아니면 '시장'의 회복이냐를 둘러싼 사회세력 간의 이해의 대립, 특히 농촌의 식량생산자와 도시의 식량소비자 간의 갈등은 첨예해질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은 당연히 조속한 통제의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식량부족의 상황 하에서는 시장원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켜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사회 내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한 농민들은 자유시장경제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던 것이다.

양차대전 이후 정통사회주의가 결코 농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사회주의자들이 농토의 국유화를 표방하였나 하지 않았나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사회민주정당들은 일차대전 종전 무렵에는 이미 小農과 中農을 더 이상 국유화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통사회주의가 경제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표방하는 한 그것은 농민들의 적대감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쟁 직후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합할 가능성을 봉쇄해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농민과 도시노동자 사이의 격심한 생산자-소비자 갈등(producer-consumer conflict)은 정통사회주의 노선의 노동연합을 통한 정치권력 확보의 가능성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양차대전 이후 정통사회주의가 예외없이 패퇴한 근본적 이유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대한 농민들의 적대감이 이들로 하여금 반드시 부르조아 정당을 지지하게끔 했던 것은 아니다. 1차대전 이후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of Western European 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84), pp. 39-59 및 Peter J. Katzenstein,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참조.

서는 보수-자유 양 부르조아 정당의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통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이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정당을 결성케 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농민당은 1920년대 후반에 완전히 상이한 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때까지 도시에 기반을 둔 어떠한 정당과의 제휴도 거부하였다. 2차대전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농민들이 각국의 지배정당과 안정된 결속을 맺는 데는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단순한 시장경제의 회복이 아니라 식량 공급의 확대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농산품에 대한 보호무역정책, 기타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이었다. 한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격심했던 식량부족과 물가 고하에서 농산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전후 5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 기간 중 공화국 내의 모든 주요 정당들은 이러한 통제정책에 가담하였다. 바로 이 사실이 왜 엘베강 서쪽의 독립 소, 중농들이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준다(Moeller, 1986; Hamilton, 1982; pp. 364-73). 이러한 예들은 사회연합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던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적극적인 전략개발 및 정책개발에 궁극적으로 달려 있었음을 보여 준다.

대공황은 유럽의 농민들을 판이한 경제적 위기로 몰아 넣었다. 이 모든 국가에서 농산품의 세계적 과잉생산은 농업소득의 격감과 농가부채의 격증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농민들의 제1차적 반발은 (金本位제 유지를 위해) 엄격한 디플레이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농가의 어려움을 악화시키면서도 ‘自救(self-help)’라는 갈수록 공허한 원칙만 강조했던 정통자유주의 노선이었다. 그러나, 공황에 접한 농민들로부터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都市購買力’이라는 생소한 논리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급속한 이해의 확산이었다. 이 논리는 특히 위기에 대응하여 전국적인 협동조합망을 구축해 나갔던 스칸디나비아 중·소 농민들 사이에 급속히 전파되었는데 바로 이들의 리더들이 사회민주당과 ‘적-녹 동맹’을 결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대공황이 동반한 특수한 성격의 경제적 위기가 이전까지 적대적이었던 농민과 노동자 간의 反자유주의 연합전선 결성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민주정당들이 정통사회주의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던 여타의 국가의 농민들은 수입관세나 제한된 가격지지정책과 같은 부르조아 정당들의 일시적인 정책대응에 만족해 하거나 아니면 파시즘으로 경도되어 갔다.

요컨대, 지배정당의 출현은 명백히 특정 역사적 국면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성을 지닌다. 또한 각 역사적 국면에 농민들이 처했던 독특한 경제적 여건이 등장할 수 있는 지배유형을 제한하였다. 즉, 자유주의적, 신자유주의

적 지배가 유독 세계대전 직후에,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지배가 유독 대공황기에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역사적 국면이 제공한 농민들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배체제 출현을 궁극적으로 결정지은 것은 농민들의 이익을 도시의 지지계급의 이익과 정책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었던 지배정당들의 정치적 능력이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어떠한 경제적 상황 하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대안들—예컨대, 일시적 비결속(dealignment), 독자적 정당 조직, 비민주적 정치세력과의 제휴 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4. 정당지배의 지속 혹은 쇠퇴

〈표 1〉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지배정당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현재까지 자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과 더불어 정치권력을 (거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오직 일본의 자민당, 스웨덴의 사민당, 그리고 이탈리아의 기민당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지배력의 지속 혹은 쇠퇴를 좌우하는가?

우리는 이미 정치경제체제에 관한 정치세력 간의 비타협적 대립이 지배정당 출현의 요건이었음을 보았다. 또한 정치경제체제에 관한 케인즈적 타협이 지배정당의 쇠퇴와 역사적으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역시 보았다. 따라서, 정치경제체제에 관한 비타협적 대립이 지속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소멸하느냐는 것이 지배정당의 배타적 지배권 및 권력독점의 지속 혹은 쇠퇴를 좌우하는 첫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배정당이 구축한 정치경제체제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비타협적 저항세력의 존재야말로 기존의 사회적 지배연합의 높은 결속력을 지탱시켜 준 핵심적 요소였던 것이다. 반면, 케인즈주의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보았듯이 정치경제체제에 관한 광범위한 타협은 바로 이 사회적 지배연합의 지배정당에 대한 결속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협적이면서 동시에 무기력한(menacing but impotent) 비타협적 반대세력의 존재는 지배정당 존속의 핵심적 요건이 된다. 일본 사회당, 이탈리아 공산당, 그리고 스웨덴의 부르조아 블록들의 현존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은 바로 일본 자민당, 이탈리아 기민당, 스웨덴 사민당의 배타적 지배력 유지를 위한 ‘필요악(必要惡)’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또 지배정당 출현의 전략적 연합세력으로 농민을 꼽았다. 그런데, 바로 이 전략적 연합세력의 급속한 수적 감소는 지배권 유지의 두번째 중요한 위협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2차 대전 이후의 산업 팽창은 사회 계급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동반하였다. 〈표 2〉

〈표 3〉 화이트칼라 노동력 추이, 1910-1980 (%)

국 가	1906-11	1920-21	1930-31	1939-41	1950-51	1960-61	1970-71	1980-81
오스트리아	4.2	—	13.9 ^b	—	20.2	26.9	35.1	45.1
벨기에	8.5	11.2	14.7	—	19.3 ^e	26.4	34.7	—
덴마크	9.7	13.4	—	18.4	21.4	27.3	36.1	—
프랑스	10.2	12.4	14.0	14.7 ^d	—	—	—	—
독일	6.0	16.2 ^a	10.0 ^c	13.6	16.0	22.1	31.1	39.7
이탈리아	4.1	6.5	8.3	—	9.0	11.5	19.5	—
네덜란드	11.9	15.8	16.6	—	20.1 ^e	29.8	40.7	41.6
노르웨이	12.7	13.5	13.7	—	19.8	25	31	40.7
스웨덴	8.9	12.9	11.5	20.1	26.8	34.4	42	46.4
스위스	12.1	14.1	15.9	17.5	21.3	25.2	35.1	—
일본	—	—	—	—	12.0 ^f	18.5	25.9	31.0

^a1929 / ^b1934 / ^c1933 / ^d1936 / ^e1947 / ^f1955

[자료] 일본 : Fukutake Tadashi, *The Japanese Social Structure*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82) 및 Ishida Kazuo, "Howaito Karaa Rodo-sha to Shinchukan-so no Keisei: Rodokumiai-undo no Kiban no Hendo to Fukuzatsu-ka," in Kurokawa Toshio and Kimoto Shinichiro, eds., *Nihon no Rodokumiai Undo: Vol. 2, Rodosha no Kosei to Jotai* (Tokyo: Otsuki-shoten, 1984), p. 152. 오스트리아(1934-80) : Österreichischen Statistischen Zentralamt, *Sozialstatistische Daten 1986* (Wien, 1986), p. 140. 기타 : Peter Flora, et al., *State, Economy,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1815-1975* (Chicago: James Press, 1987), vol. 2, ch.7 및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82* (Geneva, 1982).

와 〈표 3〉에서 보듯이 이 변화의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농촌인구의 격감과 이에 반비례한 화이트칼라 계급의 급증이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 말경에는 거의 모든 선진산업국가에서 전체 노동력에 대한 화이트칼라계급의 비율이 30 퍼센트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급증하는 화이트칼라의 미묘한 계급적 성격은 이들을 지배정당 존속을 위한 대단히 어렵지만 또 한편 매력적인 전략적 연합대상으로 만들었다. 즉, 1960년대 이후 화이트칼라 계급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농민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 세력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젊고 또 교육수준도 높으며 그들의 다양한 관심영역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조직화하기도 힘든 이 '신중산계급(new middle class)'은 도시 계급갈등의 전통적 대치세력인 육체노동자와 전통적 중산계급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사회세력이 되었다. 즉, 이들은 전통적 부르조아처럼 그들의 소득을 재산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 교육수준, 생활방식, 그리고 직업성격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통적 노동계급과 상이한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어느 정치세력도 이 급증하는 신진 사회계급의 정치적 지지를 당연시할 수는 없었다. 선거행태에 관한 어느 분석가의 지적처럼 "마치 선거권 확대시기에 새로 투표권을 얻었던 집단처럼 이들은 정치동원의 새로운 목표물로 등장하였다"(Loewenberg, 1978 : p. 20).

따라서, 전후 선진산업사회의 계급구조의 변화는 의회민주국가에서 정치적 경쟁의 전략적 축을 농촌에서 대도시로 옮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민이 지배 정당 등장의 전략적 연합세력이었다면 이제 화이트칼라 계급은 지배정당의 존속 여부를 가늠할 새로운 전략적 사회세력이 된 것이다. 현재까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 및 스웨덴 사민당의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농민으로부터 화이트칼라 계급으로 전략적 연합세력의 교체를 단행했다는 점이다.⁽¹²⁾

IV.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회민주국가에서 일당지배(one party dominance)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당지배의 등장은

- (1) 정치경제체제 구축의 배타적 권한을 둘러싼 주요 정당 간의 비타협적 대립,
- (2) 한 정당에 의한 성공적인 도시 지지세력(노동계급 혹은 전통적 부르조아) 확보,
- (3) 그 정당에 의한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농촌지지의 확보에 달려 있다.

둘째, 일당지배의 지속은

- (1) 정치경제체제의 유통을 둘러싼 주요한 반대정당과의 비타협적 대립의 지속,
- (2) 도시의 핵심 지지세력의 지속적 지지 확보,
- (3) 계급구조의 장기적 변화에의 효과적 대처, 즉 농민으로부터 화이트칼라 계급으로의 성공적인 연합세력 교체에 달려 있다.

세째, 일당지배의 소멸은

- (1) 정치경제체제에 관한 반대정당과의 포괄적인 타협 및 합의,
- (2) 그에 따른 핵심 지지세력의 결속력 약화,
- (3) 화이트칼라 계급으로부터의 효과적인 지지 확보의 실패 등에 기인한다.

위의 설명은 정당은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주도적인 전략적, 정책적 대응력을 갖춘 ‘자율적인 정치행위자(autonomous political

(12) 이에 관해서는 특히 Gerald L. Curtis, *The Japanese Way of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및 Gøsta Esping-Andersen,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참조.

actors)'라는 확신에 의거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정당은 또한 카메론이 지칭했던 '정치적 동원의 담당자(agents of political mobilization)'이다(Cameron, 1974). 경제와 사회질서에 관한 그들의 이념체계 및 그에 의거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가지고 정당은 그들의 기본 강령에 대한 대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그 호응의 조직화를 시도하며, 또 이를 안정된 정치적 지지로 동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필자는 또한 정당을 '사회적 연합의 담당자(agents of social alliances)'로 간주한다. 여러 종류의 사회적 분열의 혼재양상이 한 국가 내에서의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분열의 벽을 넘어서서 안정된 사회경제적 질서를 떠받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 정치적 연합의 구축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정당이다. 정치행위라는 것이 결국 사회 내의 제갈등의 조정과 해소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사회의 구조적 분할선을 넘어서는 연합과 타협을 모색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정치행위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당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당의 정치적 행위가 그 사회의 정치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과정 및 사회계급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역사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왔느냐를 분석해 봄으로써 특히 민주적 정치체 내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이해를 부분적으로나마 넓혀 보려 시도하였다.

참고문헌

- Aldcroft, Derek
 1977 *From Versailles to Wall Street 1919-1928*,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er, Samuel
 1982 *Britain against Itself*, New York: Norton.
- Cameron, David R.
 1974 "Toward a Theory of Political Mobilization," *Journal of Politics*, vol. 36, pp. 138-70.
- Curtis, Gerald L.
 1988 *The Japanese Way of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østa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tzmaurice, John
 1988 *The Politics of Belgium: Crisis and Compromise in a Plural Society*, 2nd ed., London: C. Hurst & Company.
- Flora, Peter, et al.
 1983 *State, Economy,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1815-1975: Vol. I, The Growth of Mass Democracies and Welfare States*, Chicago: St. James Press.

- Goldthorpe, John H.
- 1987 "Problems of Political Economy after the Postwar Period," in Charles S. Maier, ed., *Chang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Essays on the Evolving Balance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Public and Private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urevitch, Peter
- 1986 "Breaking with Orthodoxy: The Formation of the Mixed Economy, 1929-49," in Peter Gourevitch, *Politics in Hard Times: Comparative Responses t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all, Peter A., ed.
- 1989 *The Political Power of Economic Ideas: Keynesianism across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ll, Peter A.
- 1986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milton, Richard F.
- 1982 *Who Voted for Hitl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ath, Anthony, et al.
- 1985 *How Britain Votes*, Oxford: Pergamon Press.
- Hill, Keith
- 1974 "Belgium: Political Change in a Segmented Society," in Richard Rose, ed., *Electoral Behavior: A Comparative Handbook*, New York: The Free Press, pp. 29-109.
- Katzenstein, Peter J.
- 1985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 1984 "The World Political Economy and the Crisis of Embedded Liberalism," in John H. Goldthorpe, ed.,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Studie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Western European 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pp. 15-38.
- Lijphart, Arend
-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3, September.
-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kan
-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Seymour M. Lipset and Stein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The Free Press, pp. 1-64.
- Loewenberg, Gerhard
- 1978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Party System," in Karl H. Cerny, ed., *Germany at the Polls: The Bundestag Election of 1976*,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Lorwin, Var R.
- 1966 "Belgium: Religion, Class, and Language in National Politics," in Robert A. Dahl, ed., *Political Oppositions in Western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47-87.
- Luebbert, Gregory M.
- Forthcoming *Liberalism, Fascism, and Social Democracy: Social Classes and the Political Origins of Regimes in Interwar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ckie, Thomas T. and Richard Rose
- 1982 *The International Almanac of Electoral History*, 2nd ed., New York: Facts on File.
- Maier, Charles S.
- 1984 "Preconditions for Corporatism," in John H. Goldthorpe, ed.,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of Western European N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pp. 29-59.
- 1975 *Recasting Bourgeois Europe: Stabilization in France, Germany, and Italy in the Decade after World War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eller, Robert G.
- 1986 *German Peasants and Agrarian Politics, 1914-1924: The Rheinland and Westphalia*, 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Moore, Barrington, Jr.
- 1966 *Th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 Pempel, T. J., ed.
- 1990 *Uncommon Democracies: The One-Party Dominant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olanyi, Karl
- 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 Shonfield, Andrew
- 1965 *Modern Capital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tephens, John D.
- 1987 "Democratic Transition and Breakdown in Europe, 1870-1939: A Test of the Moore Thesis," *The Helen Kellog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Notre Dame, Working Paper #101 (November).
- Sully, Melanie A.
- 1981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in Austria*, London: C. Hurst & Company.
- Von Geyerz, Hans
- 1977 "Der Bundesstaat seit 1848," in *Handbuch der Schweizer Geschichte*, Zürich: Verlag Berichthaus, vol. 2.
- Wittel, Harold, ed.
- 1985 *The Policy Consequences of John Maynard Keynes*, New York: Sharpe.